

2024. 1. 25(목). 10:00
제300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〈 안건명 〉

국지도98호선(오남~수동)오남교차로
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국지도98호선(오남~수동)오남교차로

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체결안은 2024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국지도98호선(오남~수동)의 교통정체 해소와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시비 부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협약내용

- 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시행
- 사업비 분담 비율 확정

○ 사업 시행자 : 경기도 건설본부

○ 사업비 분담금액 (단위: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국 비	소 계	최종 조정안 (공사비+부대비의 50%)	
				도 비	시 비
합 계	22,391,000	9,448,500	12,942,500	8,218,250	4,724,250
공사비	18,268,000	9,134,000	9,134,000	4,567,000	4,567,000
부대비	629,000	314,500	314,500	157,250	157,250
보상비	3,494,000	0	3,494,000	3,494,000	0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나. 추진경위

○ 2020. 9.14. : 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의 (남양주시 → 경기도)

○ 2021.11.25. :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(B/C : 1.4, LOS “E” → “D”
향상)

○ 2021.12.30. : 오남교차로 입체화 실시설계 착수 (경기도 북부도로과)

○ 2022.11.18. : 총사업비 협의 (기재부 ↔ 경기도)

※ 사업비 증가분(총사업비236억원) 중 공사비 국비50%부담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

○ 2022.11.22. : 사업비 분담 요청 (경기도→남양주시)

※ 지방비 부담금 중 시비50%(6,781.5백만원) 분담 요청

○ 2022.11.25. : 사업비 분담 요청회신 (남양주시→경기도)

※ 지방비 부담금 중 시비30%(4,068.2백만원) 분담 회신

○ 2022.12.13. : 사업비 분담금액 확정

※ 지방비 부담금 중 공사비의 50% 시비 부담 (약5,034백만원)

○ 2023. 6.12. :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

※ 총사업비 22,391백만원(공사비18,268 / 보상비3,494 / 부대비629)

○ 2023.11. 5. : 사업비 분담 협약서(안) 협의요청 (경기도→시)

○ 2023.11.16. : 협약서(안) 회신 (시→경기도)

다. 추진경위

○ 2024. 1. : 시설공사 발주

○ 2024. 2. : 협약서 체결

○ 2024. 4. : 사업비 확보 및 납부

○ 2026.12. : 공사 준공

5. 검토의견

- 본 협약 체결안은 국지도 98호선의 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고, 교통체증 및 혼잡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오남교차로의 입체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- 본 사업을 통해 향상된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오남, 수동, 진접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리성, 신속성, 정시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, 나아가 시 전체의 교통 편익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국지도 98호선 오남~수동 구간이 2024년 2월 개통 예정인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

제4조(업무제휴 · 협약의 체결방법) ①~② 생략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·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2. 1. 13.>

1.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

2.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

3.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

4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·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